+

# 광주시민 10명중 7명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성"

광주시의회 여론조사

71.4% 특별광역연합 필요성 공감 '산업·교통·관광' 우선 협력 선호 시민 절반 "광역연합 전혀 몰라"

광주시민 10명 중 7명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완전한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광주·전남특별광 역연합(광역연합)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연합에 대한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아 정책 홍보 강화와 지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입 입장을 보였다. '긍정'은 49.3%, '매우 긍정'은 22.4%다.

반면, '부정'(19.0%) 또는 '매우 부정'(9.3%) 응답은 28.3%에 그쳤다.

조사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 구도가 확실하게 찬성 우세로 기울어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대형 정책 아젠다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확인돼 실질적 추진 단계로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별광역연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 1.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 없다'고 답한 부정 응답은 28.6%였다.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 응답이 79.2%로 부정 응답(20.8%)보다 크게 앞섰으며, 성공 조건으로는 '광주·전남 간 이해관계의원만한 조율'(3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선 협력 분야로는 '산업경제 활성화'(32.3 %)와 '광역교통'(31.8%) 순으로 높았고, 관광· 문화 17.7%, 복지·교육 10%, 환경·에너지 8.1% 등이다.

특히 제1호 공동사무로 추진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69.1%가 찬성했다.

정책 기대효과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43 .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25.9%), '행정 효율성 향상'(21.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려 요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2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23.5%), '권한 배분 갈등' (22.1%), '행정 비용 증가' (17.3%) 순이다.

그러나 특별광역연합에 대한 인식 수준은 '잘 알고 있음' 5.9%, '어느 정도 알고 있음' 14.9% 등 핵심 인지층이 20.8%에 불과한 반면, 전체 응답 자의 49.9%가 '전혀 모름'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 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 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p 다. /변은진기자

# 知33克 한일해협연안 人口で 可弄 지사호이 第33回日韓海峡沿岸県市道交流知事会議 2025. 11. 1.(土) - 2.(日) チッ・ 제주특별자지도 済州特別自治道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金지사 "전남을 동북아 탄소중립 실현 중심지로"

제33회 한일해협연안지사회의

'2050 전남형 탄소중립 비전' 발표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열린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 참석, '2050 전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전남 도, 부산시, 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나가사키 현, 후쿠오카현, 야마구치현, 사가현 등 한일 8 개 시·도·현이 한일해협 연안 지역의 발전과 해당 도시들의 공통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1992년부터 한 차례도 중단없이이어져온 국제회의다.

올해는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을 주제로 한일 간 우호 협력 증진과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이 추진 중인 '2 050 전남도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며 ▲2026 년부터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시행 ▲산업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대한 민국 에너지 대전환 선도 ▲블루카본·그린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대 ▲녹색생활 실천 문화 분위 기확산 등 4개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탄소중립 실현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한일해협 지역이 지혜와 경험 을 나누고 연대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며 "전남도 재생에너지와 블루 카본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동북아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8개 시도현지사들은 공동선언문에서 20 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행사의 대한민국(여수)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김재정기자

### 정진욱 'RE100 산단법' 대표발의

균형발전·탄소중립·RE100 동시 이행 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 특례 조항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2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전 력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 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대규모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안정적인 송 전·배전 담당 전력망지구 ▲REI(0) 이행 기업 입 주 산업지구 ▲근로자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체계도 마련된다. 다.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 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 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의결 하며, 산업통상부 내 추진지 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기

회·입주관리·인프라 구축 등 실무를 총괄한다. 사업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5개 법률상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특례를 부여해 신속한 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법 시행 당 시 국가AI컴퓨팅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 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AI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 다. /김진수기자

## 민주 전남도당위원장에 김원이 의원

"공정한 地選 관리·단합 최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일 나주 종합스포 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남도당 제2차 임시 당원대회를 열어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사진) 을 신임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원대회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전남 지역 국회의원, 대의원,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 해다



단독 입후보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 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이날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 찬성 86.44%를 득표해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원이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의 가치와 서민 중심 정치를 실현해온 전남도당 을 이끌 중책을 맡겨준 당원들에게 감사드린 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압 승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정청 래 대표를 중심으로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 을 이뤄 내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남의 경제 위기를 뚫어내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 며 도당의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재선 국회의원인 김원이 위원장은 서울시 정 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22대 국회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 다. /김재정기자



+